

종합

“남해안 발전계획 지역 낙후도 배려돼야”

균형발전위한 사업… 부산·경남보다 전남 사업배정에 가중치를

전남도, 장흥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남해안권을 동북아 글로벌 복합경제 중심지로 개발하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남, 부산, 경남 등 개발 대상지역인 3개 시·도의 낙후도 등을 감안한 ‘사업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28일 오후 장흥 문화예술회관에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가졌다. 전남도가 주관하고 전남발전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16개 시·군 주민과 전문가 등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철 목포대 교수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립되는 계획임을 감안할 때 전남과 부산, 경남 등 해당 3개 시·도간 인구, 낙후도, 면적, 해안선의 길이 등을 고려한 ‘배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해당지역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였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다른 법령의 계획과 명확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계획의 체계를 분명하게 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박지경 광주일보 정치부장은 “천혜의 환경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미래지향적 개발과 3개 시·도의 공동번영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간 연계성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남도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 등을 모아 국토연구원에 제출,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9월 중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은 남해안권 해안선에 인접한 전남지역 16개 시·군과 부산·경남지역 19개 시·군 등 모두 35개 시·군과 인접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해안권을 동북아 글로벌 복합경제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동북아 5위 경제권 진입’, ‘제2의 수도권형성’, ‘2시간대 통합 경제권달성’을 남해안권 발전목표로 제시했다. 또 추진 전략으로 ▲글로벌 관광휴양 허브 구축 ▲동북아 국제교류 거점조성 ▲산업간 융·복합 및 연계 ▲동서통합 및 지역상생 발전지대 조성 ▲국내·외 교통네트워크 구축 등을 꼽았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시설

‘민주당 등원’ 지역현안 처리 당력 집중해야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찾게 됐다. 지난달 24일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지 한달여만이다.

민주당이 밝힌 등원 명분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등 ‘3대 위기’극복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확산되고 있는 화해와 통합 분위기도 등원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상상과 협력의 새로운 여야 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등원을 계기로 민생도 챙기고 친서민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얼마전 발표된 ‘2009 세계개발안’이 정부 발표와

는 달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분회의에 계류돼 있는 F1특별법 통과가 급선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F1특별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내년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2015 하계 U대회 특별법 제정과 5+3으로의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수정, R&D 특구 지정 등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현안들이다.

예산 확보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닌 1조 9천억원의 비록해 호남 고속철 건설비(9천억), F1 대회 경기장 시설을 위한 880억원 등이 내년 예산에 전액 확보되어야 한다. 지자체도 지역 정치인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다.

신종플루 거점병원 체계 이대론 안 된다

광주지역의 신종플루 거점병원 가운데 일부가 환자 치료와 예방 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히 늘고 세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한 관에 거점병원마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팽배한 국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최근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14곳을 점검한 결과 일부 병원은 격리 시설은 물론 안내문이나 일반 환자들을 위한 손 세정제조차 비치하지 않는 등 극히 기본적인 체계마저 갖추지 않았다. 또한 의료진 감염과 일반 환자의 병원 이용 기피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점병원 지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만 거점병원이지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인구 10만의 동구는

3곳인 반면 30만명이 넘는 서구는 단 1곳뿐이다. 또한 인구 46만의 북구와 20만의 남구는 각각 4곳, 32만의 광산구는 2곳 등 거점병원 수와 인구비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거점병원 지정이 충분한 고려 없이 시간에 쫓겨 이뤄진 졸속 행정임에 분명하다.

신종플루가 가을과 겨울에 대유행할 것이라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점병원의 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환자의 격리와 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거점병원도 이해관계만을 따지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진료체계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DJ, 사실 밝히는 자서전 쓰고 싶었다”

박지원 의원 밝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자신의 자서전과 관련, “좋은 자서전이 아니라 역사 앞에 사실을 밝히는 자서전을 남기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7일 저녁 마포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DJ가 “출판은 내 사후에 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배석한 최경환 비서관은 “자서전 작업은 80~90% 진행된 상태로 가을쯤 원고가 나오면 이 여사와 함께 독해와 윤문 작업 등을 거쳐 올해안에 최종 원고가 확정될 것”이라며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판을 동

시에 출판하는 방안을 김 전 대통령 생전에 보고했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서 존재 여부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굉장히 치밀하고 준비를 하는 분이어서 이회호 여사에게 서랍이나 서재 등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DJ가 남긴 유훈과 지난해 일기의 비공개 부분 처리 방향에 대해 “적당한 기회에 원본 그대로 출판하는 방안을 이 여사에게 건의했으나 이 여사가 아직 경황이 없는 탓인지 특별한 말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진 무위사 아미타후불벽화 등 국보 승격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도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와 순천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이 국보로 승격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보물 제1313호인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와 1366호인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이 국보로 승격돼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로 각각 지정명칭이 변경됐다고 28일 밝혔다.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는 무위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 불단 뒤편 후불벽면에 그려진 아미타여래삼존도다. 화면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지장보살을 좌우에 배치하고 상단 구름 속에 상반신만을 표현한 여섯 구의 나한상과 4구의 화불(化佛)을 배치했다.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화엄경’ 역본중 실차나타가 번역한 80 화엄경에 따라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이 행해지는 칠처구회(七處九會)의 설법 장면을 하나의 화면에 그린 불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김치문화축제 설명회

광주김치문화축제를 열고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광태 광주시장, 김순자 세계김치협회장, 슬로푸드

박광태 광주시장은 27일 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 대사들과 대사관 관계자, EU 기업체 CEO 등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광주김치문화축제’ 설명회를 열고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광태 광주시장, 김순자 세계김치협회장, 슬로푸드

/연합뉴스

이산가족 추석 前 2차례 상봉

남북적십자회담 합의, 금강산서 각각 100가족씩

남북은 28일 끝난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를 내달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서에서 또 제2항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0월이래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년만에 재개되게 됐다.

이번 합의는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 준당국간 합의로, 앞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의 재개와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서 2항은 남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남측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북측이 남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문제도 포함, 남북간 인도주의적 현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며 관계발전을 도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상봉과 관련, 남북은 단체상봉 행사는 지난해 7월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가족별 상봉은 금강산호텔 등 기존 시설에서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빈집’으로 방치됐었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본격 사용되는 계기를 맞았다.

합의서에 따르면, 9월26~28일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약 200명과 만나고, 이어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서 약 450명가량의 남측 가족과 만나게 된다. 방문자 1인당 최대 5명까지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연합뉴스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 정부 적극 지원

고위 관계자 “공기업 참여 검토”

사업비(PF)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무안 기업도시 한중산단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방향을 밝혀 앞으로 사업진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들이 이날 무안 한중산단 현장을 방문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지식경제부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차관보)은 이날 무안군과 한중산단 대표출자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산단을 외자유치 사업으로 보고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방향을 마련해 한중산단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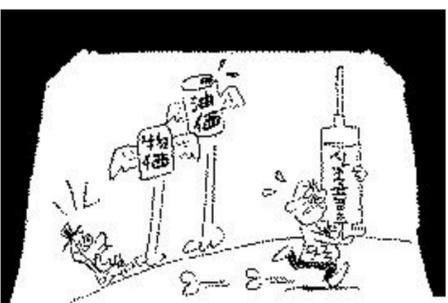
그는 “중국 국책자본 8천억원이 투입되는 한중산단은 외자유치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며 “공기업 참여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재 금융권이 매우 보수적이므로 국책은행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에 대해 확실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 한중산단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도 다음 주에 개발 출자사 간 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중산단 조성사업 본격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다른 건 신경 못쓰니 각자 알아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 화 홍 보 국 2200-661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 련 매 체 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